

제1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2절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

목차	
영국	2
프랑스	5
독일	11
이탈리아	18
일본	24
미국	31
그 밖의 자본주의 국가들	36

※ 이 글은 미완성된 원고입니다. 추후 수정 및 보완될 예정이므로, 외부에서 발표하거나 인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제1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2절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

“ '신질서'의 붕괴는 유럽에 거대한 혁명적 열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은 대중들의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그러나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충동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전 유럽에 걸쳐 지하로부터 출현한 다양한 레지스탕스 그룹들이 가진 강령은 어느 것이나 은행과 대규모 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강령들에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서명뿐만 아니라 기독교 민주주의자의 서명도 있었다. 19세기 프랑스 사회주의의 격언은 프루동의 '재산은 도둑이다'였다. 레지스탕스 시대에 상응하는 격언은 '재산은 적과의 협력이다'였다.”—《이코노미스트》1945년 12월 1일자(암스트롱외 1993, 50).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전쟁 종료와 더불어 각국은 경제·사회의 부흥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취해졌다. 많은 불균등 현상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다양한 특징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노동운동의 시대적 활동 영역은 광범해졌고, 노동운동은 새로운 중대 임무와 맞닥뜨렸다. 전후 초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진행된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각국별로 살펴본다.

영국

영국은 전쟁에 따른 피해는 입었지만, 파쇼 진영의 점령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영국 노동조합운동은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38년 당시 605만 3,000명이었고 그 가운데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TUC) 가입 조합원수는 466만 9,000명이었는데, 1945년에는 780만 3,000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TUC 가입 조합원 수는 667만 1,000명이었다. 노동조합 조합원수가 증가하고 노동운동이 사회의 권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높은 수준의 요구 실현을 기대하였다(펠링 1992, 257, 261).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기대는 1945년 7월에 치러진 총선거에서 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총선거 결과는 노동당의 압도적 승리였다. 보수당이 213석, 자유당 12석, 그리고 그 밖의 정당이 22석을 얻는데 비해, 노동당은 393석을 획득하였다. 총선거에서 노동조합 간부 출신 124명이 출마하였는데, 4명의 낙선자를 빼고는 모두 당선되었다. 보수당의 처칠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서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선거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전후 획기적인 사회개혁을 바라는 영국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클레멘스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¹⁾를 수상으로 하는 노동당 내각 20명 가운데 각료 6명이 노동조합 출신이었다. 노동당 정부는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의료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와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공병동 내에 사제 침상 설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양보해야만 했다. 또 석탄, 전기, 가스, 철도, 항공, 영국 은행, 전신·전화 등의 국유화는 별다른 반대 없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지만, 도로운송, 철강, 제당산업 등의 국유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철강 산업 국유화를 둘러싸고 상원의 반대에 부딪친 노동당 정부는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1911년의 의회법을 수정



1) 클레멘스 애틀리(Attlee)는 1945년 총선거에서 노동당 당수(1935~1955)를 역임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 런던 변호가에서 사회개혁 활동에 종사했다. 1922년 하원으로 당선, 제 2차 노동당 정부(1929~1931)에 입각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복지국가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석탄, 전기 등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실행하였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후 세계체제의 구축에 협력하였다.

하여 이를 1년으로 단축하려 시도하였다(스펙 2002, 272~273).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국내에서 개혁정책을 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정책을 유지하였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인도나 버마(지금의 미얀마)에서 ‘분할통치’라는 종래의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양보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나 지주의 도움을 빌어 인민의 요구를 억압하였다. 또 노동당 정부는 1947년 독립을 보장받은 인도를 반공운동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전개된 노동자 투쟁과 민족해방운동을 ‘더러운 전쟁’으로 규정하여 탄압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인도·파키스탄·버마 정부와 특수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黃元起 편 1954, 44~45).

노동당 정부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1927년에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을 철폐했다. 이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이 TUC에 가입하였으며, 노동당에 가입한 노동조합 원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당비 납부가 법적 승인 없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당의 정치자금에 불어났다.

한편, 노동조합운동은 대정부 관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전후 부흥의 어려움에 따라 제기된 문제—에 부딪쳤다. 미국의 ‘무기대여’²⁾ 원조가 1945년 가을에 돌연 중단되고 달리 대부 문제가 협의되어 체결되었으나, 정부는 국제수지 호전을 위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만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UC 총평의회에 대해 칙령 제1305호—파업을 비합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노·사 쌍방이 전국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했다—의 존속에 동의하라고 요청하였다. 또 총평의회는 1942년의 ‘전쟁 전 노동관행 부활법’의 효력을 한동안 정지시키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모든 측면에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무수한 행정 결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대신,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다(펠링 1992, 271).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임금 규제’를 통해 임금인상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총평의회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

2) 무기대여법(Lend Lease Act, 1940년 -1945년)은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연합국들에게 전쟁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이 1941년 12월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 약 9개월 전인 1941년 3월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전쟁 물자를 구입할 때 해당국이 선불로 지불하고 직접 운송하도록 요구한 캐시 앤 캐리 법안을 무효화시켰다. 그 이유는 영국이 전쟁과 공습 때문에 경제가 피폐해져 더 이상 무기를 구입하고 운송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1945년 9월 2일 만료되었다.

였다. 사실상의 임금동결 조치인 임금규제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큰 저항 없이 수용되었으나, 1950년에 열린 TUC 대회는 총평의회의 방침에 반대하여 “임금규제를 실시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선언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총평의회가 노동당 정부의 정책, 특히 그 가운데 임금규제 정책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게 된 까닭은 노동조합 지도부 내에 ‘두려움을 살 만한’ 공산주의자 그룹이 대두했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이 군소정당이라는 사실—1945년 선거에서 2명의 의원이 당선되었을 뿐이었다—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 전 ‘공동전선’ 운동을 제창한 시기에 있어서도, 공산당은 신중한 협력 체제를 취하여 그 실행을 위해 열성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의 ‘중요한’ 지위를 많이 획득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도 여럿 있었다. ‘전기노동조합’, ‘소방단원노동조합’ 등이 그러하였다. 또 다수의 공산주의자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도 있었다. ‘합동기계공노동조합’(Amalgamated Society of Engineers) 임원 가운데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으며, 운수일반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위원 34명 가운데 9명이 공식 공산당 당원이었다. TUC 총평의회에는 공산주의자 위원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영국 공산당은 ‘냉전’이 시작된 1947년 이후부터 정부 타도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상 애틀리와 노동조합 출신 보건부장관 애뉴린 베반(Aneurin Bevan)을 노동자계급에 대한 ‘유해한 파수꾼’으로 선언했다. 공산당은 생산증강 정책과 유럽부흥계획(마셜 플랜)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임금규제 정책 시행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비공인 파업(wild cat strike)도 불사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 방침에 대해 맹렬한 반격이 일어났다.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의 중요한 지위에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한 경우도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조합 임원 지위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한 경우도 있었다(펠링 1992, 267~269). 냉전체제에 들어가면서 반공산주의 경향은 점점 더 강화되었고, 1951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영국 노동운동은 어두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1944년 6월 2

일 ‘프랑스민족해방위원회’(Comité Français de la Libération Nationale=CFLN)³⁾가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를 선포하였고, 8월 25일 파리는 해방되었다. 9월에는 레지스탕스 지도자 드골을 임시정부 수반으로 하여 공산당까지 포함하는 내각이 구성되어 전쟁 종결을 맞았다. 1945년 10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와 총선거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제3공화정⁴⁾은 종식되었으며, 제헌의회 의원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의무를 띠고 선출되었다.

유권자의 4분의 3은 공산주의자(프랑스 공산당: Parti Communiste Français: PCF), 사회주의자(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Sectio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SFIO), 그리고 인민공화운동: Mouvement Républicain Populaire: MRP) 등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정당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는 1943년 5월 27일 정치집단과 레지스탕스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 ‘레지스탕스전국위원회(Conseil National de Résistance: CNR)’⁵⁾가 중심이 되어 헌법제정 의회를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른바 제4 공화정이 출범한 것이다.

〈표 1-3〉 1945년 10월 21일 실시한 제헌의회 선거결과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공산주의자	5,024,174	26.12	159
사회주의자	4,491,152	23.35	146
급진파.UDSR* 외	2,018,665	10.49	60
인민공화운동	4,580,222	23.81	150
보수파. 독립파 외	3,001,063	15.60	64
기권	4,965,256	20.1**	

자료: 프라이스 2001, 402.

주: * 레지스탕스 사회민주주의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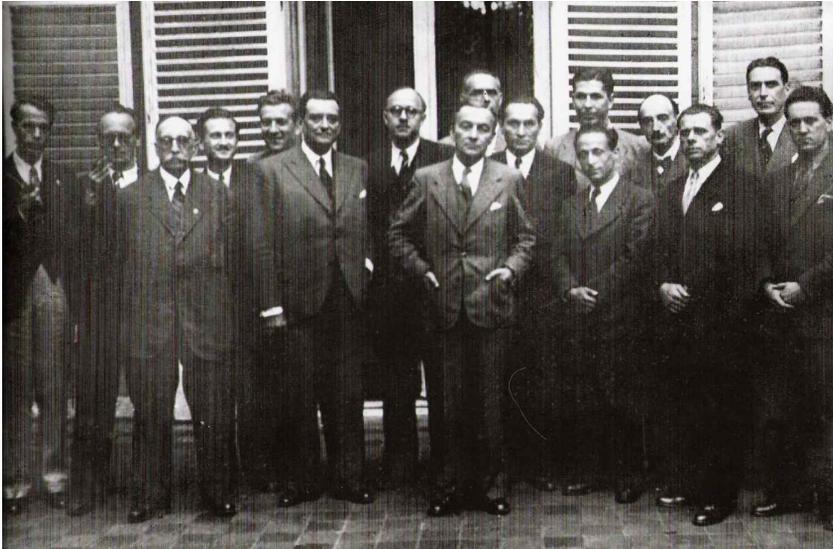
** 등록된 유권자 백분율

제4공화정은 정치적으로 4개의 국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국면은 공산주

3) 1943년 6월 알제리에서 드골과 앙리 지로가 주도하여 결성한 조직이다.

4) 프랑스 제3공화정(Troisième République française)은 1871년 프랑스-프로시아 전쟁 이후부터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점령당하고 해방될 때까지의 프랑스 정부를 말한다.

5) 1943년 5월, 모든 저항운동 조직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이 조직에는 레지스탕스 조직 8개가 참가했는데, 공산당, 사회당, 부르주아 정당 4개, 노동조합 조직(프랑스 노동총동맹: CGT와 기독교노동조합연맹: CFTC) 2개가 그것이었다. CNR 결성은 저항운동 조직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레지스탕스전국위원회(CNR) 위원들

의자와 사회주의자 그리고 기독교민주당이 연합한 3당 체제 내각이 통치했던 시기이다. 이 국면은 1947년 5월에 끝나며, 경제·사회 개혁이 실시된 시기이다. 두 번째 국면은 급진파와 다른 중도파

들의 연합이 공산주의자와 드골주의자 모두를 반대하며 제3 세력을 형성하여 이전의 3당 체제를 대체했던 시기이다. 세 번째 국면은 1951년 선거 이후 급진파와 보수파가 내각을 구성하고 지배 집단으로 대두한 시기이다. 이들의 지배는 1956년 사회주의자와 그 제휴 세력이 다수파가 되어 심각한 재정 문제와 알제리 식민전쟁에 대응하는 노력을 재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프라이스 2001, 403).

여기서는 첫 번째 국면에 해당하는 시기의 상황부터 살펴본다. ‘3당 협력체제’(tripartisme)에 동의한 세 정당은 상호 협력하기를 열망하였고, 이러한 열망은 CNR 강령에 포함된 개혁안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 하였다. 1944년 3월 15일 채택된 CNR 강령은 인민의 요구에 충실한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의 목표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확립, 파시스트적 통제 철폐, 생산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가정책 방침의 생산력 강화, 독점적 주요 생산수단·공동 노동 산물·에너지·지하자원·대 은행 국유화, 노동자 경영참가 등이었다.

사회개혁의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개선을 통한 노동과 휴식의 권리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수준 향상, 통화안정을 통한 구매력 보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그것에 따른 경제·사회적 조직체로서 권리 강화, 국가와 수익자 대표의 관리에 따른 완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고용 안정,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 시행을 통한 농업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안정, 지역투자 강화

를 통한 농업노동자와 공업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 해소, 퇴직금제도 설치, 파시스트의 테러행위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손해배상과 연금제도 마련 등이다.

CNR 강령에는 전후 프랑스 노동운동이 목표로 제기하였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전후 프랑스 노동운동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반파시즘 저항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광민사 편집부 1980, 79~80).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이 여러 영역에서 시행되었다. 먼저 1944년 9월 14일 임금인상 50%와 물가동결령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노동자 측 요구를 온전하게 수용했다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경제재건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다.

다음으로 산업(석탄, 항공, 전력, 가스 등)과 금융기관(프랑스 은행과 4대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독일과 협력했던 대기업의 국유화가 추진되었다. 국유화 정책은 사회주의 방식의 국유화가 아니고, 국가가 주식을 지배하는 형태로 경영 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국유산업의 관리는 정부, 경영자, 노동조합 등 각 이익대표 집단의 공동관리 형태를 취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프랑스 특유의 노동자 경영참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 단위 노동자대표제는 인민전선 정권 시기에 도입되었으나, 전후에는 CNR의 강령이 제시한 노동자 경영참가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45년 2월 22일, 기업위원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위원회 법제화는 해방 당시 많은 기업에서 저항과 노동자들이 생산위원회 또는 경영위원회를 설립하였던 사실과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 참가가 사실상 자연발생적으로 실현되었던 사실을 현실적인 근거로 하였다.

기업위원회법은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산업·상업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기업위원회의 기능은 노동·생활조건 결정을 위한 노사협의, 사회적 시설 관리, 경제적 영역에서의 기업관리 운영에 대한 노동자 참가 등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1946년 수정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기업의 조직·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노동자 참가로 규정하였다. 노동조합은 기업위원회를 기업 내 노동운동의 발판으로 삼았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행정 조치는 1945년 10월 5일의 포고령으로 실행되었다. 먼저 가족수당은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환자, 실업자, 많은 자식을 부양하는 독신여성)과 자식 2명 이상을 양육하고 또 그 자식이 15세 이하인 사람들에게 수입액에 관계없이 지급되었다. 또 임신수당, 출산수당, 그 밖의 가족수당, 그리고 사회사업에 지출될 개인·집단적 단위에서의 급부제도도 시행되었다.

사회보장관리위원회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 외에도 가족조합도 참가하였다. 노동조합 대표로는 프프랑스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⁶⁾, 노동총동맹—노동자의 힘(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ère: CGT-FO)⁷⁾, 그리고 프랑스기독교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CFTC)⁸⁾이 참가하였다.

CNR의 강령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재건과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한편으로는 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건과 개혁 작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1946년 4월, CGT는 노동조합원 550만 명을 대표하는 전후 제1회 총동맹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의 80%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주요 산별노동조합(금속, 건설, 섬유, 철도, 지하자원, 식품, 농업)과 지방노동조합을 장악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자의 이러한 지도력은 독창력, 조직능력, 헌신성, 그리고 10년 동안 파시즘에 대항한 투쟁을 통해 획득된 것이었다. 로윈(V.R. Lorwin)은 이러한 공산주의자의 지도력을 두고 “공산주의자가 보유한 지도력은 오랜 지하활동과 감옥생활에서 형성되었다. ……그 지도력은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더 강건하고 더 훈련되었으며 더 유연하였다”고 표현했다(Foster 1956, 421).

공산주의자들은 CGT 안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지만, 자신들의 힘을 신중하게 행사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CGT 집행기관 내에서 다른 분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은 지지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역할을 제공했으며, 공산주의 노동조합 지도자 브노와 프라손(Benoit Frachon)과 사회당의 레온 주오(Leon Jouhaux)를 CGT의 공동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CGT는 전후 초기에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생산을 부흥하고, 또 그러한 경제재건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CGT는 제1회 총동맹 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 ……더욱 높은 임금은 우리의 노력과 노동의 과실로서 달성될 수밖에

6) 1895년에 결성된 프랑스 최초의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으로서 1906년 아미앵 헌장을 채택하여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을 운동노선으로 채택하였다.

7) 1948년 CGT에서 분리되어 결성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으로서 공산주의 노선에 반대하여 개량주의적인 이론과 실천을 주장하였다. CGT-FO의 결성을 위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AFL-CIO)가 원조자금으로 3만 5,000 달러를 지원하였다.

8) 1919년에 결성된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계급투쟁에 반대하여 사회평화와 직업의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강조하였다.

에 없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파업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1946년 파리 인쇄노동자 파업을 비롯하여 1946년 P·T·T 파업, 1947년 4월의 국영 르노 공장 파업 등이 그것이었다. 르노 공장 파업은 4월 25일 노동자 1,500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발생했는데, 4월 28일에는 파업 참가자가 3만 명으로 늘어났다. 곧 분쟁 조정이 시작되었으나, 중요한 일은 CGT가 이 파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맞아 공산당원인 노동부장관이 내각에서 물러났다.



CGT 공동 사무총장 브노와 프라손.
레지스탕스 출신이다

1947년 4월부터 7월까지 파리 지구의

철도, 탄광, 은행, 표백 노동자와 리옹의 교통노동자, 그 밖의 지역들에서 파업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연말에 이르러서도 생계비 앙등에 따라 파업은 도무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11월 14일에는 석탄 채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함으로써 석탄 값이 40%나 올라 이것이 가스, 전력, 교통요금, 나아가서는 식료품 가격 인상까지 부추겼다. 11월 12일에는 마르세유에서 전차요금 인상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르노와 파 드 칼레에 있는 석탄 노동자 파업에서부터 해운, 조선, 금속, 건설, 공무원 파업으로 확대되었다. 파업 참가 인원은 250만 명에 이르렀다. 파업은 폭동의 양상을 보였다.

파업이 이처럼 노도와 같이 전국을 휩쓸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 플랜)에 대한 노동자 저항이라는 정치적 요인도 있었다. CGT의 프라손은 조직 내에 국민파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파업투쟁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결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정부 권력과 파업 지도부 사이의 다툼이 전면에 나타나면서 11월 중반부터 12월 초에 이르러 파업은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1946년과 1947년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CGT 내부의 노선 대립이 조직 분열로서 표면화하였다. 12월 18일, ‘노동자의 힘’(CGT—FO)이 조직되어 CGT로부터 분리를

결정하였고, 1948년 4월 12~13일 정식 결성되었다. CGT는 1895년 결성 이후 세 번의 분열을 경험하였는데, 첫 번째는 1922년 공산주의 노선을 표방한 ‘통일노동총동맹(CGTU)’의 발족이었고, 두 번째는 1939년 프랑스로노총동맹(CFTC)의 이탈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 당시 노동자의 힘(CGT—FO)결성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분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석탄 산업의 파업은 계속되었다. 9월 18일, 정부의 석탄 산업 축소와 미국산 석탄 수입 증대 정책에 반대하여 제기된 파업이 민주통일 정권 수립과 마셜 플랜 시행 반대라는 정치적 성격을 띤 파업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파업에 대응하여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였다. 파업의 주요 무대였던 알레와상·에틴느에서는 무력 충돌로 광산노동자 다수가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프랑스 노동운동은 이 파업을 계기로 정체기에 들어갔으며, 프랑스 자본주의의 재건이 본격화함에 따라 점점 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다(광민사 편집부 1980, 95).

독일

1945년 당시 독일은 폐허였다. 전쟁에 지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통당하는 독일인들은 무너진 제국(帝國)의 파편과 잔해 속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플브룩, 2001: 301). 이러한 정황은 독일이 1945년 5월 8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독일이라는 국가형태가 소멸되고, 연합국이 직접 통치하게 된 형세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전승국들은 독일의 장래를 예측할 수도 없었으며, 독일 점령에 대한 처지도 서로 달랐다. 패전 후,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의 분할 점령 상태에 들어갔다. 전후의 독일 점령정책을 구상한 1945년 2월의 알타회담이나 1945년 7월과 8월의 포츠담회담에서는 전승국들이 네 개의 점령 지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개별 점령 지구에서는 각 점령국의 정책 방침에 따라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령 초기에는 점령정책의 기본목표는 명료하였다. 독일의 비(非)나치화, 비군사화라는 목표가 그것이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74~75).

비나치화 정책의 대표적인 조치로는 1945년 11월부터 1946년 10월까지 열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들 수 있다. 재판은 통상의 전쟁범죄에 추가하여 ‘평화에 관한 죄’,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해 독일 제3제국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뉘른



제2차세계대전 직후 독일

베르크 재판은 사회의 최고위층에 대한 비나치화도 취해졌지만, 일반 국민 차원에서도 나치 경력 소유자의 공직 추방이나 교육 민주화(나치와 군국주의 교육 배제, 민주주의 사상 중시) 등을 통해 비나치화 목표를 추구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비나치화 작업이 나중에 시행된 별도 재판이나 토지개혁, 그리고 국유화 조치 등을 통한 구조적 변화와 인물 교체 등으로 대단히 과격하게 진행되었던 반면, 서부 독일의 비나치화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역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비나치화의 근본 목표가 과연 독일에서 나치를 제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치에게서 나치즘의 오명을 벗겨주려는 것인지 애초부터 불분명했으며, 점령국들은 초기에 나치 ‘범죄의 집단성’이라는 처벌 개념에 근거하여 일련의 차별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소련 점령지구

그러나 장문의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하여 독일인들을 ‘주범’(major offenders)에서 ‘무죄’(exonerated)에 이르는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 작업은 관료주의의 악몽이었다. 이것은 독일인들을 제3제국에 연루된 사실에 직접 대면시키기보다, 그들로 하여금 변명을 늘어놓고 과거를 은폐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나치들은 대체로 뉘른베르크 재판(모든 전승국이 참여하였다)을 받았거나 또는 나중에 별도의 재판을 받았던 거물들을 제외하고는 차츰 서독 사회에 편입되었다(플브룩 2001, 305).

한편, 탈군사회는 독일 공업생산의 제한과 관련되었는데, 군수생산이나 항공기 생산은 금지되었고, 철광과 기계 등의 생산도 크게 제한되었다. 다만, 생산제한을 둘러싸고 점령국들 사이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련은 실물 배상에 관심이 컸으며 점령지구의 공장 설비를 대량 해체하여 자기 나라로 운반해 갔다. 이에 비해 다른 점령국들은 공장 해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독일 동부지구를 점령한 소련과 독일 서부지구를 점령한 미국·영국·프랑스의 통치방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두 점령지구의 통치 상황을 살펴본다.

소련은 전쟁 종료와 더불어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던 독일공산당을 합법화하기 위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승인하였다. 모스크바에서 훈련 받은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당 대표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와 함께 이미 1945년 4월 말 베를린에 들어와 재빨리 지역 정치를 장악했다. 1946년 4월에는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통합하여 '통일사회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SED)을 창설하였다. 당시 소련 점령 지구에는 통일사회당 말고도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과 '자유민주당'(Liber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도 활동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친(親)통일사회당 정당으로서 '민주농민당'(Demokratische Bauernpartei Deutschland)과 '독일민족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이 창설되었다. 소련 점령지구의 이들 정당은 1948년까지 통일사회당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소련 점령 지구에서는 이러한 빠른 정치 변화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도 이루어졌다. 먼저 토지개혁이 단행되었다. 100 헥타르 이상의 대토지와 나치 당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몰수되어 재분배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소농과 토지를 갖지 못한 농업노동자에게 돌아갔고, 일부는 동유럽에서 피난 온 독일인들에게 배분되었으며, 또 일부는 국유화되었다. 대기업과 광산 그리고 은행이 국유화되었고, 나치 전범 재산이 몰수되었다. 그리하여 오랜 역사의 뿌리를 소유하였던 융커⁹⁾가 몰락하였고, 대자본가들이 물질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한편, 정치에서는 통일사회당이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미국·영국·프랑스가 점령한 서부 독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긴 했으나, 동부 지구처럼 그렇게 거세지는 않았다. 점령국들은 서부지역에서 과격한 사회·경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서부 독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

9) 융커(Junker)는 프로이센의 지배 계급을 형성한 보수적인 토지 귀족을 일컫는다. 동부 독일 지방에서는 농민의 부역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대농장이 경영되었다. 이와 같은 대농장을 소유·경영한 토지 귀족을 융커라 불렀다. 융커는 농업 경영과 더불어 프로이센 행정 기구의 중요한 직위나 상급 장교의 지위를 독점하였고 큰 세력을 휘둘러서 특권을 유지했다. 융커 세력은 통일 후의 독일에도 존속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부 독일의 농업 개혁에 따라 소멸되었다.

제를 유지시키려 노력했다. 또 점령국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각기 달랐다. 프랑스는 배상금을 가차 없이 수취해 가려 하였고, 영국은 머지않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대중적 기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북부 공업지대에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역시 독일 경제를 무너뜨리기 보다는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부 독일의 경우 낮은 생산, 불충분한 배급, 그리고 전쟁 기간에 축적된 거대한 유동성 자산이 서로 결합해 상품에 대한 엄청난 초과수요를 창출했지만, 산업 생산은 1947년 말 당시에는 1936년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수송은 전쟁 시기의 폭격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으며 불충분한 식량배급으로 석탄생산은 위축되었다. 철강 산업은 비군사화의 희생양이 되었고, 식량생산은 전쟁 이전 수준의 70%에 지나지 않았다. 형편이 이러한대도 서부 독일의 점령당국은 기존의 경제 통제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암스트롱 외 1993, 85~87).

이런 상황에서 유럽 재건을 위한 방책으로 나온 것이 1947년 6월 발표된 ‘마셜 플랜’이다. 마셜 플랜은 유럽의 정치·경제적 재건을 추진하되, ‘개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의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트루먼 독트린’에서 밝힌 대로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목적 재건방안이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셜 플랜은 서부 독일을 소련 점령지구로부터 떼어내어 새롭게 등장한 냉전 구도에 맞추어 설계된 서유럽의 포괄적인 정치·경제 조직망 속에 편입시켜버린 조치였다(플브룩 2001, 308~309).

1947년 1월에는 이미 미국과 영국의 점령지구가 2국 공동통치지구(bizone)로 통합되었고, 의사(擬似)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경제평의회’(Economic Council)가 설치되었다. 이에 대응해 소련 점령 지구에서도 초보적 행정조직인 ‘독일경제위원회’(German Economic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독자 노선을 추구해온 프랑스도 결국 미국과 영국의 정책에 보조를 함께 했다.

1948년 2월에는 미국·영국·프랑스와 베네룩스 3개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런던에서 개최한 6개국 회담에서 독일 서부지구의 마셜 플랜 참가와 연방체제 창출 방침이 논의되었고, 독일 서부 지역을 서유럽 진영으로 편입시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1948년 6월에 서부 지구에서 행하여진 화폐개혁, 즉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라이히스마르크(Reichs Mark)를 도이치마르크(Deuts

che Mark)로 대체한 조치는 소련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포함하였다. 경제통제정책의 대폭적인 완화 방침에 따라 실시된 화폐개혁에 대응해 소련도 자국의 점령 지구에서 독자적인 화폐를 도입했다.

또 소련은 이를 명분으로 소련 점령 지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4개국 공동관리 대상이었던 베를린과 서부 지구 사이의 교통을 봉쇄하고 서베를린으로 보내는 전력



독일의 분단과 점령국

공급을 중단했다. 이것이 이른바 ‘베를린 봉쇄’이다. 이에 서부 지구 점령국들은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항공편으로 생활필수품을 공수(空輸)함으로써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대항했다. 전쟁 발발 위험이 1949년 5월까지 계속되었고, 그 사이 독일 동서 분할은 결정적인 사실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1948년 8월 이후부터 준비된 서부 독일의 헌법이 드디어 1949년 5월 23일 ‘기본법’(통일 독일 헌법 제정 때까지의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여 이 명칭이 사용되었다)이 공포되고,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수립

되었다. 소련 점령 지구에서도 베를린 봉쇄 기간에 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1949년 3월 헌법안이 인민평의회에서 승인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1949년 10월 7일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 공식 성립되었다.

이처럼 독일 동서 분단은 패전 후의 점령이라는 전제 아래 냉전 심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다. 독일인들은 통일국가로서 자립을 강하게 희망했지만, 국제 대립의 냉혹한 현실은 오히려 이러한 분단을 고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76).

전후 독일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이와 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몇 해 전에 이미 노동운동은 그 토대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전후에 자신들의 조직과 정당을 새롭게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동자들은 공장 단위로 노동자평의회를 결성하여 나치에 협력하였던 기업주를 추방하고 관리권을 장악하였으며, 점령군 당국과 접촉하여 식량·의류·주택 등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노동자평의회는 지역적 연대를 시도 하

였고, 군수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초로 하여 노동조합운동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였다.

소련 점령 지구에서는 1945년 6월 10일 독일 점령 소련군 최고사령관 주코프 원수의 명령 제2호에 따라 반파시즘 정당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인정되었다. 1945년 6월 17일, 베를린 시청 광장에서 지난날 노동조합 조직에서 활동했던 간부 6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지난 날 비합법 활동을 벌였거나 망명생활을 했던 사람들, 수용소에 갇혀 있다 풀려난 사람들도 참가하였다. 이들은 통일된 노동자계급의 사상·정치적 지도에 따라 자유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집회에서는 새로운 통일된 자유 노동조합의 설립을 호소하는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에는 나치 사상과 독일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투쟁, 행정기관과 경영에서 파시스트 분자 추방, 평화 경제 재건을 추진하는 점령 당국 지지, 사회보장 정책 실시, 노동자계급 이익 옹호, 반파시즘 민주 진보 정신에 따른 근로인민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1945년 12월과 1946년 1월, 노동조합 기관 선거가 실시되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1946년 2월 9일 베를린에서 전(全)점령지구 노동조합 제1회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노동조합원 160만 명을 대표한 ‘자유독일노동조합총동맹’(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FDGB)이 설립되었다(바른케 1954, 101~102). 1949년에 FDGB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 가입하였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 점령 지구에서도 1945년 후반기에 기업과 지역에서 노동조합 조직 재건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들 노조는 서로 다른 점령국의 법률에 따라 각각의 점령 지구에서 활동을 벌였다. 1947년 11월 영국과 미국 점령 지구에서 공동노조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프랑스 점령지구 노조도 그 뒤에 여기에 참가하였다.

특히 전후 독일 부흥에 관한 미국 정부 정책은 노동조합운동을 승인 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한 미군정의 정책에는 몇 가지 특수한 점이 있었다. 첫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재건된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 둘째, 서독 분리를 유지하려는 미국 계획에 대해 간섭할지도 모를 통일된 독일노동운동의 형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노동운동이 서독 자본주의 존재를 위협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 등이었다(Foster 1956, 4

22).

1946년 11월 이후, 4개국 점령 지구의 노조 지도부는 동·서독 회의를 몇 차례 열었으며, 12월 하노버 회의에서는 독일 경제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건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는 “양차 세계대전의 발생은 자본의 집중, 독점, 카르텔, 트러스트의 형태를 취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패권을 남용하여 전쟁으로 몰고 갔던 세력의 존재를 독일 국내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소련 점령 지구 내에 결성된 FDGB와 함께 전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을 조직하려던 계획은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 독일 분국의 방해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좌절되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

1949년 10월 뮌헨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노동조합 전국 중앙조직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이 결성되었다. DGB는 결성 당시 16개 산별노조에 소속된 노동조합원 490만 명을 포괄하였다. DGB가 창립대회에서 채택한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은 기본법 제14조와 제15조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공업생산(석탄, 광석, 석유채굴), 기간산업(철강생산, 기초적 화학제품산업), 에너지산업, 식료품 제조, 주요 수송수단, 신용제도의 사회화를 요구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러한 국유화 산업의 총체는 ‘집중적인 경제 계획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GB는 사회화와 계획화 말고도 경제의 노사공동관리를 주장하였다(마르티네 1983, 65).

노동조합의 조직 재건과 더불어 1947년부터는 파업투쟁이 전국에 걸쳐 벌어졌다. 먼저 루르 지방 전역에서 파업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났다. 처음 나온 요구는 식량과 주거문제였지만, 곧 국유화 요구로 전환되었다. 이 요구를 둘러싸고 뒤셀도르프와 에센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2월에는 공장협의회들이 국유화에 대한 투표를 조직하였다. 광산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는 90% 찬성이었다. 파업은 계속 확산되었다. 3월 25일에는 뷔페르탈에서 노동자 8만 5,000명이, 그리고 뒤셀도르프에서 노동자 8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파업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노동자 35만 명이 거리로 나와 대중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광산노동자들은 작업을 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천히 일하기(go slow)’ 방식을 이용하였다.

같은 해 4월 1일, 브룬스비크에서는 노동자 시위대와 군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

으며, 무장한 순찰대가 거리를 순회하기 시작하였다. 『이코노미스트』(1947년 5월 24일자)는 노동조합연맹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금까지 노조 간부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파업투쟁을 자제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영국군 당국과 협조정책을 펴는 데 대해 설교하고 실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중의 분위기는 금지와 억제가 별로 소용없는 상황이 되었다. 식량 공급의 개선과 행정 혼란의 일소만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암스트롱 외 1993, 90~91).

1947년 이후 냉전 체제를 맞아 독일 노동운동은 분단된 두 개의 독립국가 창설, 파시즘이 초래한 피해, 전쟁이 남긴 물질·정신적 유산, 외국의 점령과 지배, 독점 자본의 공세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탈리아

1945년 5월,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파르티잔을 중심으로 한 레지스탕스 조직이 로마에서 정부 통치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는 세 가지 중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즉, 첫 번째는 파시스트와 그 동조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공직에서 몰아내는 ‘숙청’ 문제였다. 두 번째는 제도문제였는데, 어떤 형태의 헌법과 정부가 전후 이탈리아에 적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세 번째는 경제문제였다. 전후 경제제건을 비롯하여 인플레이션, 실업 등의 문제와 좀 더 장기적인 경제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듀건 2001, 346).

먼저 숙청 과정부터 보자. 가장 악명 높았던 파시스트들은 이미 레지스탕스 대원들이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그리고 1945년 봄부터 여름까지 무차별적인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 해 4월에서 6월에 이르는 3개월 동안 대략 1만 5,000명이 살해되었다. 누가 파시스트였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문제였지만, 누가 파시스트가 아니었는가를 가려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수백만 명이 파시스트 국민당에 동참했거나 파시스트 동맹에 등록했다.

인민해방위원회가 숙청 작업에 착수해 파시스트 협력자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을 때, 혼란과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재판부의 수많은 판사들과 배심원들은 피고인들 못지않게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파시스트 협력자에 대한 판결을 주저하거나 거부하였다. 결국 실용주의 또는 일종의 ‘집단적 과실’이라는 정서가 우세하였고, 체계적인 숙청을 단행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

갔다. 숙청 실패의 결과는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관료정치가 여전히 지속되었고, 수많은 중요 입법안들이 채택되지 않은 채 쌓여만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체제 결정에 대해 보자. 1946년 5월, 이탈리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Vittorio Emanuele) 3세는 왕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움베르토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하였다. 한 달 뒤인 6월 2일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2백만 표차이로 공화제가 채택되었다. 특히 충격을 던져준 것은 북부와 남부의 정치적 균열이었다. 로마와 남부는 군주제를 선택한 반면, 북부는 이를 거부했다.



1946년 이탈리아 수상 데 가스페리

제헌의회 선거에서는 총 556석 가운데 기독교민주당은 207석을, 사회당은 115석을, 공산당은 104석을 차지하였다. 행동당은 겨우 7석을 차지하였으나 1947년에 해산하였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지역에서 자치권이나 독자적인 법률에 따른 보통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를 설치한 지역정부가 들어섰다.

1946년 7월 26일, 기독교민주당 지도자 알치데 데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¹⁰⁾를 수상으로 하는 정부가 출범하였고,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소수의 공화당원이 입각하였다. 1948년 1월 1일부터 제헌의회가 제정한 새 헌법이 시행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1948년 4월 18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전은 대단히 격렬하였고, 교회는 기독교민주당을 적극 지원하였다. 미국 측에서도 공산당을 배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은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군사개입마저 고려했던 상황이었다. 공산당은 이에 대응할 만한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했다.

10) Alcide De Gasperi(1881.4.3~1954.8.19): 이탈리아의 정치가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이탈리아 왕국의 마지막 수상이며, 뒤이어 이탈리아 공화국의 초대 수상을 지냈다. 기독교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1945년부터 1953년까지 8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며 이탈리아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

선거 결과는 기독교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였다. 기독교민주당은 48.5%의 득표율을 획득하였고, 상·하원 합쳐 574석 가운데 305석을 차지했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각각 31%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1946년 선거에 비교해 8% 감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의 의석수는 106석에서 140석으로 증가한 반면, 사회당의 의석수는 115석에서 41석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1947년에 벌어졌던 사회당의 분열에서 기인한 결과였다. 이로써 향후 40년 동안의 이탈리아 정치 구도가 형성되었고 할 수 있다. 정치체제는 기독교민주당과 공산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분극화되었고, 어떤 점에서는 이탈리아는 일당 체제의 국가가 되었다(듀건 2001, 350~351, 360).

그리고 전후 이탈리아가 직면하였던 세 번째 과제인 경제문제에 대해 보자. 전후 이탈리아 경제는 서유럽 경제체제에서 경제계획이나 국가개입에 따라 빠르게 복구되고 발전하였다. 기본 공익사업(철도·탄광·전화 그리고 전력 공급의 일부)은 이미 국유화되어 있었고, 정부는 또 1930년대에 은행업에서 중요 지분을 획득했다. 이것은 신용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은행들은 철강·조선·기계 공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회복되었는데, 1946년까지는 산업의 고정 자본투자가 거의 전전(戰前)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생산은 1947년 당시 전전 수준의 90%에 이르렀다(암스트롱 외 1993, 92~93).

이탈리아에서 추진된 전후 복구에서 미국 원조는 주요한 요소였다. 1943년부터 1948년까지 이탈리아는 마셜 플랜에 따른 15억 달러와 20억 달러 상당의 물자를 미국에서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섬유산업이 큰 혜택을 입었다. 대규모 철강 기업인 핀시테르와 피아트와 같은 대규모 공기업과 사기업들도 선진 산업국가들을 ‘따라 잡는’ 데 필요한 새로운 공장들을 매입하면서 호황을 누렸다.

산업 투자와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물가 상승은 공식 생계비 지수에 따르면 1947년 초에 연간 거의 100%에 이르렀다. 임대료는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빵 배급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식량 가격은 빠르게 올라 국민 소득의 약 10%가 농민과 자치농의 손으로 이전되었다. 1946년 초 노동·자본 교섭에서 타결된 임금협정 상의 ‘임금 물가연동제(sliding scale)’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를 부분적으로 보호해주었을 뿐이었고, 이는 또 7개월 동안의 임금 협상 휴전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높은 수요와 방대한 정부 적자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였다(암스트롱 외 1993, 94).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와 더불어 실업의 증대, 소비 축소, 투기 만연, 효과적인 계획 부재는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전국적인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지역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1947년 6월, 유조차운전 노동자, 인쇄노동자, 부두 노동자, 그리고 호텔 노동자들이 일으킨 거대한 파업의 물결은 총파업으로 발전하였다.

지금까지 전후 초기 이탈리아가 직면한 주요 과제였던 파시스트 숙청, 정치체제와 제도, 그리고 경제 복구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거니와, 이 시기 노동운동 전개 과정을 개괄해 보기로 한다.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1943년 연합군의 이탈리아 진주와 더불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는 1943~1944년의 총파업과 봉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1944년 6월 ‘노동조합 통일에 관한 선언’—‘로마협정’으로 부른다—이 체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세 개의 지도적 경향인 공산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기독교민주 계열의 지도적 노동조합대표들이 서명하였다.

로마협정은 정치적 견해차이나 종교적 신조에 관계없는 노동조합의 통일을 호소하였다. 로마 협정은 통일 노동조합이라는 대원칙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였다. ① 모든 노조간부의 선출에 있어 총괄적 내부 민주주의 보장: 기초 조직에서부터 총지도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부 구성에서 소수파의 합당한 비례 참여 보장. ② 어떤 정파를 막론하고 모든 성원들에게 의사표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신조에 대해 상호 존중. ③ 노동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전시킨다는 전제에서 근로대중의 조직적 표현에 따라 민주 정당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정당으로부터 독립이 그것이었다(정병기 2000, 117).

로마협정에 따라 결성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이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CGIL)이었다. CGIL은 1945년 1월 나폴리에서 최초의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노동조합원 130만 명¹¹⁾을 대표하는 해방지구의 대의원이 주로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21년 만에 공개적으로 열린 최대의 대회였으며, 여기서 규약을 채택하고 요구 프로그램을 선언하였다. CGIL은 전쟁이 종료된 뒤 1947년 6월, 피렌체에서 전국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공공사업과 산업의 광범한

11) CGIL 조합원수는 1945년 7월 당시 300만 명을 헤아렸으며, 1947년 6월 당시 조합원수는 573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국유화, 그리고 대토지소유제의 해체를 포함한 개혁적인 강령을 채택하였다.

CGIL은 1947년에 이르기까지 파업을 자제하였으며, 그 보다는 오히려 파업을 억제하였다.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1943년 7월 무솔리니 몰락 이후 마셜 바돌리오(Marshall Badoglio)정부와 협력관계를 시작한 당시부터 인민전선 정책(Popular Front Policy)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그 이후 1947년 5월 데 가스페리 정부에서 축출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공산당의 이와 같은 협조정책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도 직접 영향을 끼친 결과, CGIL이 임금동결 협정에 합의하는가 하면 전후 경제복구를 위해 '작업리듬, 규율 그리고 생산을 촉구'하는 데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노동운동 기조는 충격적이고 눈물겨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였다(암스트롱 외 1993, 96~97).

공산당과 CGIL이 추구해 왔던 정치·경제·사회의 개혁 목표 실현 가능성은 해방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박해졌다. 저항운동을 통해 생취한 기업경영 공동결정권이 단계적으로 폐지된 것이 그 한 가지 사례였다. 더욱이 직장평의회(Commissioni interne)조차 노동조합의 분열로 말미암아 1948년 이후부터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공산당·사회당과 CGIL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했는데도, 1947년 이후의 역학관계가 세력을 되찾은 대자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노동운동의 침체를 불러온 몇 가지 요인들에서 기인하였다. 그 첫째 요인으로는 연합군의 진주를 들 수 있다. 1947년 7월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연합군정은 공개·비공개적으로 이탈리아 지배계급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하였다. 마셜 플랜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1947년 초부터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난 노동조합운동 내 정파들 사이의 대립과 분열을 들 수 있다. 1947년 6월에 열린 CGIL 피렌체 대회에서 정파들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노동조합 통일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이 대회에서 치른 선거에서 정파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선거 결과, 공산주의계가 57.8%, 사회주의계가 22.6%, 기독교민주계가 13.4%, 사회민주계(대회 개최 몇 개월 전에 사회당에서 분리된 사회당 우파) 2.2%, 그리고 공화계가 2.0%를 각각 차지하였다.

분쟁의 초점은 CGIL의 기본방침을 '순수 노조' 요구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요구도 병행하면서 실제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기독교민주계 조

합원들이 민주적 권리 보장과 확대를 위한 정치적 태도 표명을 허용한 CGIL 규약 제9조의 무조건 삭제를 주장한 반면, 공산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조합원들은 이 조항에 대해 일정한 제한(3/4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만을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세 번째 요인은 1948년 이후 실행으로 옮겨진 통일노조의 분열이었다. 1948년 7월 14일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팔미로 톨리아티(Palmiro Togliatti) 암살기도가 있는 뒤, CGIL이 파업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 중단과 저항시위가 행하여졌고 드디어는 시위대와 경찰대 사이에 유혈충돌이 잇따랐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 기독교민주계는 공산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즉각 중지하라는 최후통첩과 함께 CGIL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7월 22일 가톨릭 노동단체 ACLI (Associazioni Cristiane Lavoratori Italiani) 전국협의회는 새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설립을 공표하고, 10월 ‘자유 CGIL’ 가칭 LCGIL이라는 가톨릭계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또 1949년에는 사회민주계와 공화계 조합원들이 사회당에서 탈당한 일부 노조간부들과 함께 CGIL을 떠났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소수는 가톨릭계와 함께 1950년 4월 ‘이탈리아 노동조합총동맹’(Confederrazio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CISL)을 결성하였고, 기독교민주계의 대세 장악을 우려한 나머지 다수도 곧 ‘이탈리아노동자연맹’(Unione Italiana dei Lavoratori: UIL)을 설립하였다. CGIL 분열이 이탈리아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그것은 그 뒤의 냉전 시기 이탈리아 노동운동 발전을 가로막는 작용을 하였다(정병기 2000, 126).



톨리아티(1893~1984). 이탈리아 공산당 초대 사무총장으로 “이탈리아의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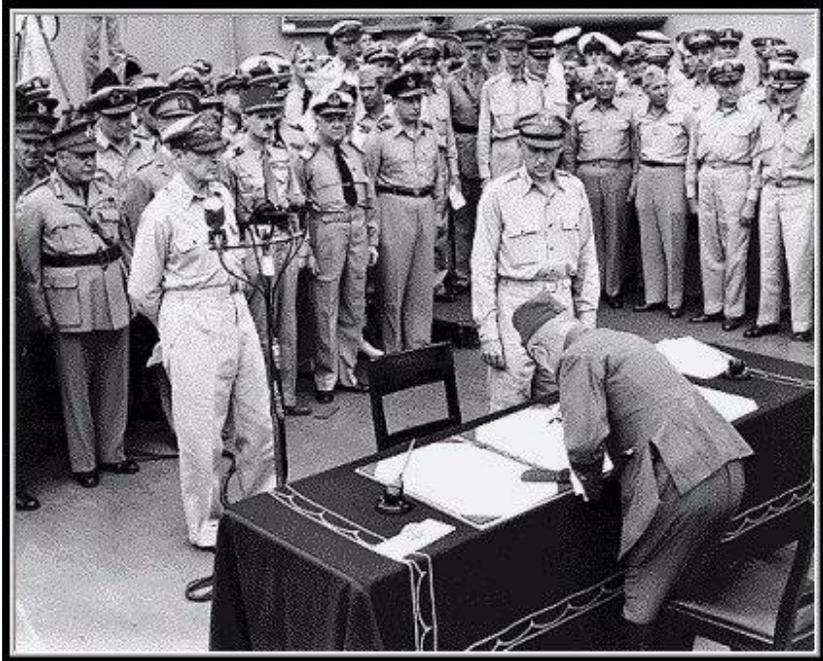
1945년(쇼와 20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는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여기서 무조건 항복의 의미는 반과시즘 전쟁을 수행했던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했다는 뜻이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대표들이 주요 연합국 회의를 열고 일본의 항복 조건을 정한 문서이다. 포츠담 선언에는 일본의 항복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① 일본 국민을 속이고 세계 정복을 목표 삼은 과오를 저지른 권력과 세력을 영구히 일소한다.
- ②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통해 타민족으로부터 침탈한 영토를 방기한다.
- ③ 군대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해체한다.
- ④ 민주주의의 부활.강화를 방해하는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고, 언론.종교.사상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확립한다.
- ⑤ 재군비와 군수산업을 금지하고 평화경제를 건설한다.
- ⑥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평화적 정부가 수립될 경우 점령군은 물러난다(이누마루 기이치 1989, 60~61).

그런데 일본을 점령한 군대는 명목상으로는 연합군이었지만, 실제로는 태평양 전쟁 당시 가장 강대한 무력을 사용하여 일본군을 패퇴시킨 미군이였다. 형식상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해 9개국 극동위원회가 워싱턴에 설치되고 점령군 사령부의 자문기관으로서 미국·영국·소련·중국 4개국 ‘대일(對日)이사회’가 도쿄에 설치되었으나, 어쨌든 군대를 관장한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 점령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갖는 ‘사실상의 단독 점령’이 실행되었다.

패전 다음날, 황족 가운데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하카시구니 노미야(東久邇宮)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성립하였다. 전후 최초의 이 내각은 전쟁 기간에 자유주의계 또는 군부 내의 개명파를 망라한 패전 처리 정부였다. 이 정부는 연합군총사령부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일본 대표

마찰을 빚어 10월 5일 총사직하고 10월 9일 시대하라(幣原) 내각이 들어섰다. 이리하여 절대적 천황제는 해체되고, 일본 정부는 법제상 부르주아 입헌군주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이누마루 기이치 1989, 67).

1945년 10월 4일, 연합군총사령부(GHQ)는 ‘치안유지법’, ‘치안경찰법’, ‘국방보안법’을 폐지하고 정치범 즉각 석방, 특고경찰¹²⁾ 폐지, 천황제 비판 자유를 지령하였다. 10월 10일, 정치범 3,000명이 석방되었으며, 일본공산당이 당 결성 이후 23년 만에 합법정당으로서 공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총사령부는 1945년 10월 11일 ‘5대 개혁’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였다. 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참정권 보장을 통한 일본 여성의 해방—일본 여성이 정치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일본 가정 복지에 직접 기여하게 될 새로운 정치개념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② 노동조합 결성 촉진—착취와 흑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③ 학교 교육의 자유주의화. ④ 비밀수사와 학대로서 끊임없이 국민에게 공포를 주는 제도의 폐지. ⑤ 경제조직의 민주화(히구치 도쿠조 1990, 123~124).

연합군총사령부의 5대개혁 안에는 부수적으로 농지개혁도 포함되어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농지개혁에 따라 산과 임야를 제외한 농지에 대해서는 반봉건적인 지주 토지소유제도가 해체되었다.

한편, 국제민주세력 감시 조직으로서 ‘극동위원회’는 일본의 ‘노동조합에 관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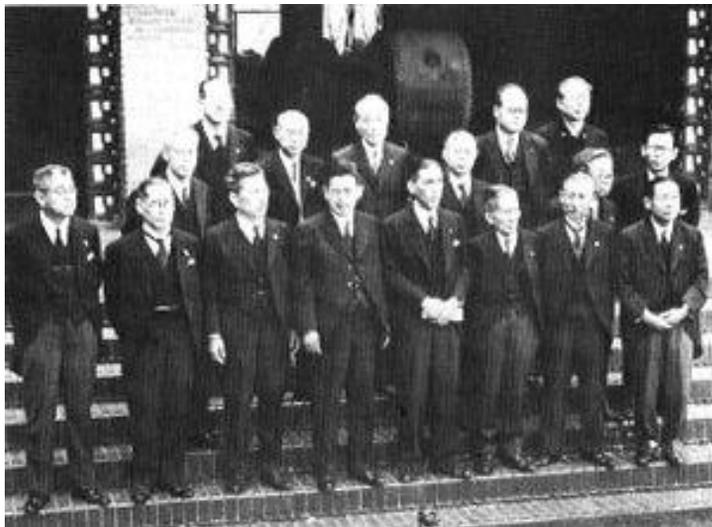
12) 특별고등경찰의 약어로서 1911년부터 1945년 폐지될 때까지 반체제적인 언론·사상·종교·사회단체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행했던 일본의 비밀경찰을 일컫는다. 창설당시에는 공산주의자를 주된 사찰 대상으로 했지만, 차츰 사찰 대상을 확대하여 사찰하였다.

개 원칙'을 결정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하고 활동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1945년 12월 22일 공포되었고, 노동관계조정법은 1946년 9월에 공포되었으며 노동기준법은 1947년 4월 7일 공포되었다.

5대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본국 헌법(1946년 11월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실시가 예정되었다)이 제정되었다. 일본국 헌법은 ① 주권 재민(主權 在民)과 국가 주권, ② 전쟁 방기(放棄)의 평화주의, ③ 의회제 민주주의, ④ 국민 기본 인권 보장, ⑤ 지방자치라는 민주·평화 5원칙을 확립하였다(이누마루 기이치 1989, 69). 헌법 제28조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정당 활동도 재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라는 어용기관이 구성되었으며, 제국의회는 유명무실화하였다. 전후

1945년 11월 2일 일본사회당이 결성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일본자유당이, 11월16일에는 일본진보당(뒤에 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이, 11월18일에는 일본협동조합동맹당이, 12월 18일에는 일본협동당이 결성되었다.



가타야마 내각

1947년 2·1총파업이 종료된 뒤, 4월 25일 신헌법에

따라 치르진 총선거에서 사회당이 143석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고 다음으로 자유당이 131석으로 제2당이 되었으며 민주당이 121석을 차지했고, 공산당은 4석밖에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당 가타야마 대츠(片山 哲) 위원장을 수상으로 하는 사회당·민주당·국민협동당 3당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가타야마 정부는 '내핍생활'을 내세워 물가와 임금 안정을 강도 높게 시행했으며, '기업재건정비법'을 제정하여 독점자본의 '합리화'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독점자본의 재건을 촉진하였다. 이처럼 가타야마 내각은 사회주의 정당다운 정책은 어느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고 독점자본의 하수인 역할만 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사회당 좌파도 정부를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가타야마 내각은

1948년 2월 물러났으며, 그 뒤를 이어 민주당의 아시다 히도시(芦田均)를 수상으로 하는 사회당·민주당·국민협동당 3당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아시다 정부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국가공무원법 전면개정을 목적으로 한 정령(政令) 201호의 공포를 시작으로 직계제 기본임금 설정을 통한 임금인상 억제, 노동자의 생산관리 투쟁에 대한 탄압 등으로 사회당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거기에서 쇼와전공(昭和電工) 의혹이라는 오직사건으로 1948년 10월 아시다 내각은 퇴진하였다(시오다 쇼오베에 1985, 20~121).

한편, 1947년 12월에 ‘트루먼독트린’이 발표되고 ‘냉전’체제에 들어감으로써 미 점령군은 공산당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노동운동과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분열을 목적으로 공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더욱이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방벽’, ‘극동의 군사공장’으로 삼아 일본 전국토를 군사전략상의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가 격변을 겪는 가운데, 일본 노동운동은 전후 다른 국가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부흥과 고양 양상을 나타냈다. 사실상 일본은 선진자본주의권에 속하는 국가였는데도, 노동운동은 강력한 세력화의 오랜 전통을 지니지 못한 채 침체를 거듭하였다. 일본 노동조합운동은 전전의 전성기에도 노동조합원 50만 명 정도만을 포괄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극심한 탄압 때문에 그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려웠다.

전후 일본 노동자들은 오랜 전쟁과 패전의 타격으로 극도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47년까지 산업 생산은 전전의 10분의 1수준에서 3분의 1 수준으로밖에 증가하지 못했으며, 1947년의 실질임금은 전전 수준의 30%에 지나지 않았다. 전후 6개월 동안 한 달에 42%를 기록할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었고, 농업 생산이 황폐한 가운데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전후 반년 사이에 실업자는 400만 명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만연하는 투기, 높은 재정 적자,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는 불안정의 징후였고, 낮은 생산과 이윤은 한층 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였다(암스트롱 외 1993, 77~78).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조직화와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조직상황을 보면, 1945년 11월 당시 509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38만 명의 노동자가 조직되었으며, 1946년 6월에는 1만 2,000개 노동조합, 노동조합원은 36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조직률은 41.5%였다. 대규모적이고 급속하게 조직된 이들 노동조

합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취했으며, 전후 출발부터 양대 전국중앙조직으로 분열된 양상을 드러냈다.

1946년 1월, ‘일본노동조합총동맹’(총동맹)이 결성되었고, 8월에 제1차 전국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조직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원을 85만 명으로 발표했다. 총동맹은 사회당에 대해서만 지지를 표명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전일본산업별노동조합회의(산별회의)’가 결성되었다. 산별회의는 전전의 ‘일본노동조합평의회’와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의 계급·민주적 전통과 세계노련이 결성 때 표방한 통일전선 사상을 계승하고자 했다. 산별회의는 또 노동조합의 지역적 결합과 전국적인 산업별 단일 노동조합 조직화를 강조하였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75). 총동맹과 산별회의에 가입하지 않은 중립적인 노동조합도 일정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급속한 조직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생활조건 개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전후 초기 투쟁에서 등장한 전술이 이른바 ‘생산관리투쟁’이었다. 1945년 10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노동자들은 전쟁 시기 언론에서 전쟁 협력을 부채질한 책임을 추궁하여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경영자를 배제한 채 자주적으로 신문을 편집·발행하는 투쟁을 벌였다. 제1차 요미우리 투쟁은 성공을 거두었다. 생산관리투쟁은 생산부흥 요구와 민주화 요구를 결합한 투쟁방식으로서 노동자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전술이었다. 이 투쟁전술은 여러 곳으로 파급되었다(시오다 쇼오베에 1985, 109).

1945년 12월에는 게이세이(京成)전철 노동자들이 임금 500%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처음에는 무임승차로 승객을 수송하다가 다음에는 차량을 늘리고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아 투쟁이 끝날 때까지 회사에 넘기지 않고 노동조합이 운임수입을 관리 하였다. 투쟁은 결국 높은 임금인상을 쟁취하고 승리하였다. 생산관리 투쟁은 그 밖에도 일본강관쓰루미(鶴見), 도쿄도 직원, 도시바(東芝), 도호(東寶)촬영소, 미츠비시 미우다(三稜美見), 미쓰이 미우다(三井美見) 탄광 등의 노동조합이 생산·업무관리를 시행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노동자의 생산관리 투쟁에 대해 국가권력과 자본은 이러한 투쟁이 노동자권력의 기초를 형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경영권 확립’을 명분으로 반격을 시도하였다. 1946년 2월 1일, 내무·사법·후생·상공 4부 장관 공동 명의로 “폭행·협박·소유권 침해 등의 위법행위를 단호히 단속한다”는 취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6월 13일 정부는 생산관리는 정상적인 쟁의행위 수단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1946년 5월 1일에는 1935년 제16회 메이데이 이후 11년 만에 제17회 메이데이가 열렸다. 도쿄에서는 인민광장(현재는 천황궁 앞 광장을 일컫는다)에 노동자, 학생, 시민 등 50만 명이 모였으며 전국에서는 200만 명가량의 인민이 집결하여 시위행진을 벌이면서 ‘일한 만큼 먹어라’, ‘민주인민정부 수립하자’고 호소하였다. 또 5월 19일에는 ‘식량 메이데이’로 불리는 대집회에 인민대중 30만명이 집결하여 정부와 점령군에게 식량위기 해결을 요구하면서 ‘민주전선 즉시결성’을 주장하였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78~79).

1946년 여름 들어 연합군총사령부(GHQ)의 협력을 얻은 일본 정부는 먼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동관계조정법을 입법화하고 6월의 제2차 요미우리신문 노조 투쟁에 대한 탄압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국철(國鐵)과 해원(海員)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를 통보했다. 국철 12만 5,000명, 해원 4만 3,000명 해고에 대해 국철과 해원노동조합은 공동투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원노동조합은 9월 10일부터, 국철노동조합은 9월 15일부터 파업을 결행하기로 결정했다. 투쟁은 해원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많은 노동조합들이 동조 파업을 벌였다. 국철과 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완강한 투쟁은 국철과 해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뒤, 산별회의는 ‘합리화’ 정책 분쇄와 임금인상을 기본요구로 내세우고, 민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고 반대 ‘산업별 통일투쟁’을 10월에 집중하여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산별 10월 투쟁’이다. 산별회의 방침에 따라 도시바(東芝)노련 조합원 5만 명이 10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56일 동안의 장기 투쟁 끝에 2만 명에 대한 해고 방침을 철회시켜 승리를 거두었다.

10월 투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신문·방송 노동조합들은 NHK 방송 노조의 22일 동안 파업 말고는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위협과 간섭으로 파업을 결행하지 못하였다.

10월 투쟁의 중심은 전기산업(電産) 파업투쟁이었으며, 이 투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례였다. 전산 투쟁은 54일 동안에 걸친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공동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조합 투쟁을 지원함과 동시에, 세계개혁과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설정을 위해 임금심의회 설치에 관한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 큰 성과를 올렸다. 그리하여 생활급이 중심이 되고 능력급부분은

비교적 적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전산형임금체계’를 성취한 것이다.

산별 10월 투쟁에는 노동자 56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파업 참가자는 32만 명에 이르렀다. 이 ‘산별 통일투쟁’은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통일단체협약상으로 7시간 노동시간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일방적인 인사조치 거부 등의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 권리를 신장하였다(시오다 쇼오베에 1985, 112~113).

이 시기 최대의 노동자 투쟁은 2·1 총파업이었다. 산별 10월 투쟁으로 민간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민간산업에 비해 45%에 지나지 않았다. 또 전후 관료기구에는 여전히 전전의 반봉건적 또는 비민주적 요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관료기구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별 10월 투쟁이 국철, 교원, 체신,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확대된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최저임금제 실시, 근로소득세 철폐, 종합소득세 면세점 인상, 노동관계조정법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민간산업 노동자에게도 공통적인 절실한 요구였기 때문에 산별회의를 비롯하여 민간부문 노동조합들도 투쟁에 합류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관공청노동조합공동투쟁위원회’(全官公廳勞動組合共同鬪爭委員會: 全官共廳共鬪)의 공동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이에 전관공청공투는 파업투쟁 체제를 수립하고, 12월 17일 전국 각지에서 요시다(吉田)내각 타도와 생활권 확보 국민대회를 열었다. 여기에 산별회의, 총동맹, 국철노조, 도노련(都勞連), 사회당, 공산당이 참가하여 도각실행위원회(倒閣實行委員會)를 설치하였다.

1947년 1월 1일 산별회의는 ‘준비는 되었는가, 전진이다. 민주주의혁명의 해 1947년!’이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요시다 수상은 라디오를 통해 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노동자들을 ‘불순분자’라고 규정했다. 1월 15일에는 전관공청공투를 비롯하여 산별회의, 총동맹 등 전국의 노동조합이 참가하여 ‘전국노동조합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일 오전 0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부 당국은 1월 22일, 대우개선 잠정안을 제시하고 현행 급여 50%인상이라는 양보안을 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알선을 의뢰했다. 1월 31일 오후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총파업 금지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밤에는 전관공청공투 의장 이이 미지로(伊井彌四郎)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보후퇴 이보전진, 노동자·농민 만세,

우리는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면서 파업중지 명령을 발표했다. 총파업 중지 지령은 견고한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던 노동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2·1 총파업 계획은 최후 순간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 계획은 중요한 성과도 획득하였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급여수준은 600엔에서 1,200엔으로 평균 2배가 인상되었다. 또 각 노동조합은 차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것은 민간산업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2·1 총파업 투쟁 준비과정에서 노동전선의 통일이 한걸음 진전되었다. 산업별 전국조직이 차례로 결성되었고, 3월에는 조직 노동자의 84%, 446만 명을 포괄하는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련)가 구성되었다(시오다 쇼오베에 1985, 117~118).

미국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미국은 연합국의 전후 세계구상과 세계자본주의 체제 성립을 주도하였다. 1941년 8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대서양 위에서 회담을 갖고 영토 불확대, 민족자결, 통상 자유화, 사회보장 충실, 항해 자유, 전반적 안전보장제도 확립, 그리고 군비축소 등의 원칙이 포함된 전후 세계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은 아직 전쟁에 참가하기 전이었지만, 같은 해 3월에는 무기대여법을 제정하여 연합국 측에 대량의 무기원조를 시작하여 중립법이라는 제약조건이 있었는데도 친연합국 자세를 드러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일본 전쟁이 시작되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 동맹 규정에 따라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감행하였다. 유럽 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겹쳐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었다. 1942년 1월 1일, 미국·영국·소련·중국 등 26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 속에는 대서양 헌장이 연합국 측의 공통된 세계구상으로 재확인되었다.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은 다른 연합국들에 대량의 군수품을 공급하는 병기창 구실을 함으로써 엄청난 생산 확대를 달성할 수 있었고, 조선·항공 산업·자동차·무기·기계기기·화학공업 나아가서는 원자력 개발 등에서 두드러진 기술혁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후에 전 세계 광공업생산액의 62%와 금보유액의 66%가 미국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막강한 생산력을 토대로 하여 통화 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IMF), 금융 면에서는 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무역 면에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세 축으로 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경제체제, 이른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system)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사실은 미국 국내 정치에도 직접 반영되었다. 그러나 당초 미국 정부는 통상교섭이나 경제원조 등 주로 경제적 수단으로 통상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낙관하였으나, 미·소 대립의 격화나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진 혁명운동의 고양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군사적인 대외간섭능력 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원폭의 독점, 전략공군 강화 그리고 해외기지망의 유지는 제2차 대전 기간에도 추구해 왔



전후의 세계경제질서를 결정한 1944년 브레튼우즈회의
 지만 미국 국민의 대다수는 종전과 더불어 미군의 동원 해체와 복귀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의 총병력은 대전 종결 시의 1,212만 명에서 1948년에는 144만 명까지 줄었다.

이와 같이 전후 초기 미국에서는 정부의 대외군사간섭 의도와 능력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했는데, 트루먼 정권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1947년에는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고 육·해·공군을 국방총성에 통합하였으며, 외교·군사·내정정책의 조정을 촉진하는 최고결정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경제적 체질은 그 뒤로 고착화되었으며, ‘군산복합체’로 불리

는 군부와 일부 산업독점체의 유착구조를 형성했다. 이것은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의 패권국 지위를 고수하려는 데 따른 결과였다(하마바야시 마사오 1996, 69~70).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전후에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재편을 주도하는 가운데, 노동자계급의 노동·생활조건은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았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도 고양 국면을 나타냈다. 미국의 노동자계급은 전쟁 동안 진행된 생산 확대와 고용 증대 그리고 경제 호황에 따라 일정 정도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었다. 1941~1944년 사이에 제조업의 경우 평균 실질소득은 19% 증가했으며, 노동시간은 40.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어났다. 1인당 소비는 세금 인상과 배급제 때문에 향상되지 못하였으나, 실질소득의 증대는 저축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이러한 이득은 위협받게 되었다. 초과 노동이 없어지고 비전쟁 노동자(non-war workers)의 주당 임금은 1945년 봄에서 1946년 겨울 사이에 10% 하락했으며, 전쟁 노동자의 임금은 3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들의 실수령액은 11% 감소하여 1941년 수준으로 저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파업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1개월 평균 100만일에서 1945년 마지막 3개월 동안에는 1개월 평균 700~800만일로 늘어났다. 1946년 1월에는 전기 노동자 17만 5,000명과 철강노동자 80만 명, 제너럴 모터스(GM) 노동자 22만 5,000명,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노동자 약 100만 명이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노동손실일수는 2천만일로, 2월에는 2천300만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46년 한 해 동안의 노동손실일수는 1억 1천600만일을 기록했다.

1946년에는 유리 제조 노동자, 캘리포니아 기계 노동자, 뉴잉글랜드의 섬유노동자, 그리고 GM 노동자들이 100일 이상 파업을 벌였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파업은 GM 파업이었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에 대해 30%의 임금 인상 요구(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주당 40시간 노동)를 제시하면서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요구의 절반 이상을 획득했다. 회사 측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작업속도 조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과 파업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으려했으나, 노동조합의 거부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얼마 뒤, 포드(Ford) 회사 경영진은 고용과 해고, 승진과 좌천, 생산 스케줄의 결정, 그리고 사규를 어긴 혐의가 있는 파업노동자와 그 밖의

노동자 징계에 이르기까지 무제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새로운 관리 유형을 만들었다(암스트롱 외 1993, 36~37).

1946년 5월에는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고, 같은 해 5월 말에는 광산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하여 큰 폭의 임금인상을 획득하였다. 정부와 자본 측은 노동자계급의 격렬한 파업투쟁에 대응해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였다.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은 ‘정부가 소유한 어떤 산업에서도 파업을 분쇄할 수 있는 비상 조치권’(emergency powers)을 승인하는 법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 자본 측은 의회에 대해 산업 압류와 중지 명령과 같은 위기 조치를 넘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한층 더 근본적인 공세를 펴도록 요구하였다. 의회는 1947년 6월 태프트-하틀리법(Taft - Hartley Act)을 채택함으로써 정부와 자본 측의 압력을 수용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켓을 들고 파업하는 GM노동자. 파업 100일을 자축하는 문구도 있다

● 클로즈드 샵(closed shop)¹³⁾을 불법화하고, 각 주가 유니온 샵(union shop)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 회사에 대해 인준되지 않은 노조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2차 파업 또는 보이콧(boycott)을 불법화한다.

● 계약이 종료되기 전 60일 동안의 냉각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는다.

● 노동조합의 계약 파기나 불법파업 또는 보이콧에 대해 회사는 노조

13) 클로즈드 샵은 노동조합원만을 고용하는 협정(또는 업체)를 가리키고, 유니언 샵은 노동자를 채용한 뒤 일정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협정(또는 업체)를 말한다. 반면, 오픈 샵(open shop)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고용하는 협정(업체)이다.

를 고소할 수 있다.

●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한다.

●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업에 대해 노동쟁의 조정 기간을 80일로 연장하는 법원의 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업이 진행되기 전에 비밀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 간부에게 자기는 공산당원도 아니며,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비헌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를 주창하는 어떠한 단체의 지지자도 아니라는 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연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헌금할 수 없다.

노동자에 대한 공세와 외교 정책 제안을 연결시켜 주는 공통의 끈은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강조였다. 1946년 당시 공산당은 노동조합운동에 일정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산업별조직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CIO)를 비롯하여 전기노동조합, 식품·담배노조, 비철도수송 노조, 농기계 노조, 그리고 주요 공업 도시의 지역노조 연합 등에서였다. 또 공산당은 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무렵,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플랜의 채택으로 공산당에 대한 공격이 힘을 신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공격은 공산당뿐만 아니라 진보운동과 전투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암스트롱 외 1993, 128~129).

전후 노동자투쟁이 급격하게 고양되고 이에 대한 국가권력과 자본의 공격이 강화되는 가운데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전쟁 기간에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강제증제를 포함하여 정부의 무파업 정책에 협조하였다.

그런데도 전쟁이 종결된 뒤, 미국 노동조합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조직 확대를 이룩하였다. 1945년 말에서 1948년 말에 이르기까지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의 가맹인원은 693만 1,229명에서 750만 명으로 늘어났다. CIO는 그때까지 노동조합원수를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발표한 60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946년 당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적

용대상이 되는 노동자수는 1,480만 명이었다.

AFL은 냉전이 시작되기 전 3년 동안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 대해 악의에 찬 공격을 전개하였다. 반면, CIO는 WFTU 창설에 기여하였고, WFTU 활동을 지지하였다(Foster 1956, 437~438).

그 밖의 자본주의 국가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 히틀러군은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점령하여 정당과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단체 활동을 금지하였다. 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노동조합과 관련 조직들은 빠르게 복구되었으며, 어느 나라 경우에도 조직 노동자수가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연합군과 사회민주주의 우파 그리고 가톨릭교회는 인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가로막았다.

오스트리아 노동자들은 전쟁이 종료되자마자 노동조합운동을 재건하였으며, 1948년 4월 ‘오스트리아노동총동맹’을 결성하였다. 1948년 12월 당시 조합원 17만 8,680명을 포괄하였는데, 이는 전 산업노동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노동운동은 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도하였다.

스웨덴은 전쟁 기간에 중립국을 표방하였으나 나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1947년 조합원 105만 3,266명을 포괄한 노동조합운동은 전후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사회민주당 정부가 온건한 개량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반동적 전제(專制)통치는 전쟁 기간이나 전후에도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위기를 맞아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 반대세력은 스페인 국내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유엔 총회는 1946년 프랑코 체제를 비난하고 스페인의 축출을 결의했다. 그런데도 냉전체제에 들어가면서 스페인에 대한 각국의 제재조치는 차츰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노동운동은 미처 복구되지 못한 채 장기적인 침체를 겪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운동은 1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투쟁 전통을 축적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평의회(ACTU)’는 1945년 당시 조합원 150만 명을 포괄하였는데, 이는 조직 가능한 노동자의 65%에 해당하였다. ACTU는 WFTU 창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뉴질랜드 노동조합과 함께 네덜란드 제국주의에 대항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저항과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였다(Foster 1956, 426~427, 440~441).

<참고문헌>

- 광민사 편집부 편역, 1980, 『프랑스 노동운동사』, 광민사.
- 정병기 편저, 2000, 『이탈리아노동운동사』현장에서 미래를.
- 시오다 쇼오베에(塩庄兵衛), 1964, 『日本労働運動の 歴史』, 労働旬報社, 우철민 옮김, 『일본노동운동사』, 1985, 동녘.
- 이누마루 기이치(犬丸義一).츠지오카 세이진(辻岡靖仁).히라노 요시마사(平野義政), 1989, 『前後日本労働運動史』, 學習の友社.
- 히구치 도쿠조(樋口篤三), 1990, 『日本労働運動 歴史と教訓』, 第3書館.
- 하마바야시 마사오(浜林正夫).키무라 히도수케(木村英亮).사사키 류우지(佐佐木爾), 1996, 『新版 前後世界史 上』, 大月書店(일본).
- 黃元起 편, 야마시타 류조(山下龍三) 옮김, 1954, 『세계현대사 상, 하』, 靑木書店(일본).
- Amstrong, Philip.Glyn, Andrew.Harrison, John, 1991, Capitalism since 1945, Basil Blackwe ll, Ltd. 김수행 옮김, 1993,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 Duggan, Christopher, 1994, A Concise History of Ita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정하 옮김, 2001, 『미완의 통일 이탈리아사』, 개마고원.
- Foster, William Z. 1956, Outline History of the World Trade Union Movement, Internati onal Publishers, 정동철 옮김, 1986, 『세계노동운동사, I,II』, 백산서당.
- Fulbrook, Mary, 1992, A Concise History of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학이 옮김, 2001,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개마고원.
- Martinet, Gilles, 1979, Sept Syndicalismes, Éditions du Seuil, 온누리 편집부 옮김, 1983, 『7개국 노동운동』, 온누리.
- Pelling, Henry, 1976, A History of British Trade Unionism, Macmillan Press, 박홍규 옮 김, 1992, 『영국 노동운동의 역사』, 영남대학교 출판부.
- Price, Roger, 1993, A Comcise History Of Fr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경근.서 이자 옮김, 2001, 『혁명과 반동의 프랑스사』, 개마고원.
- Speck, W.A. 1993, A Concise History of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내주 옮 김, 2002, 『진보와 보수의 영국사』, 개마고원.
- Warnke, Herbert, Überbrick über die Geschite der deutschen Gewerkschaftsbewegung, 2. Auflage, 1952, Tribüne, Verlag und Druckereien des FDGB., Berlin, 국민문고편집위 원회 옮김, 1954, 『ドイツ労働組合運動小史』, 大月書店(日本).